

도미니카 공화국, 전력배전회사 국영화 결정

□ 전력배전회사 국영화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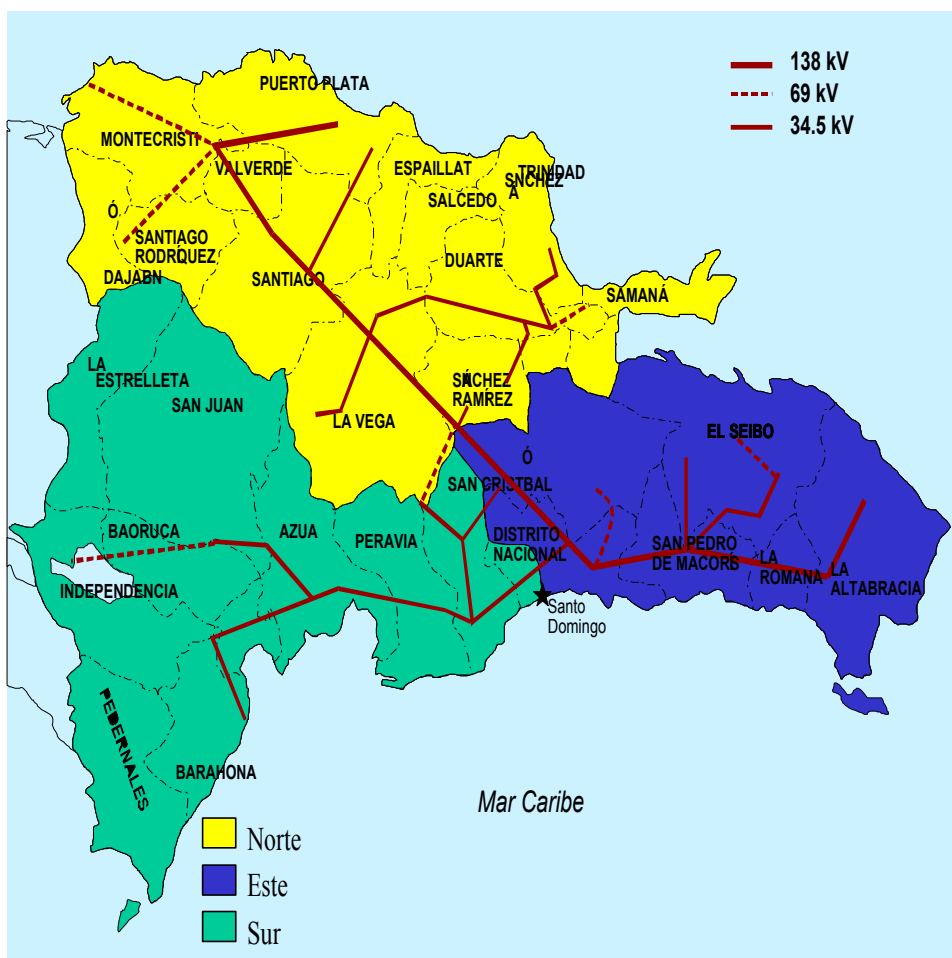
- 지난 9월 10일, 도미니카 공화국 메히아 대통령은 1999년에 민영화된 2개의 전력배전회사(북부와 남부) 지분 50%를 재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힘.
- 전력배전회사 재국영화 결정은 전력부문 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, 빈번한 단전사태 발생 등 전력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이는 현재 전력 부족량이 300MW 수준이고, 매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7%이나,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전력부문의 투자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.

□ 전력회사 민영화 및 전력위기 경과와 전망

- 도미니카 공화국은 1999년 전력난 해소를 위해 국영 전력공사(CDE)를 분리하여 2개 화력 발전회사와 3개 배전회사를 민영화(수력발전회사, 송전회사, 기술지원회사는 민영화 제외)한 바 있음.
- 민영화 국제입찰 결과, 66.4만kw 발전용량의 Haina 화력발전회사와 57.3만kw 발전용량의 Itabo 발전회사가 각각 Seaboard社와 New Caribbean Investment社에 낙찰되었으며,

- 북부 및 남부 지역을 관장하는 2개 배전회사(Edesur, Edenorte)와 동부지역을 관장하는 배전회사(Edeeste)는 각각 스페인계 Union Fenosa社와 미국계 AES社에 낙찰되었으며, 향후 40년간 3개 배전회사가 각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 독점권을 가짐.

<그림>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 송배전망 체계



- 그러나 도미니카 공화국은 전력부문의 민영화 이후에도 전력난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단전사태가 계속되고 있고, 이에 항의하는 소요가 빈발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 왔음.

- 단전사태는 발전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 이외에도 배전망이 노후화되어 전력손실률이 60%에 이르고 있으며, 정부기관을 포함한 일부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연체함에 따라 배전회사가 발전회사에 전기요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발생함.
 - o 배전회사에 따르면, 민영화 이후 누적된 정부의 체납 전기요금만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메히아 정부는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9월에도 전력요금인상(평균 45.1%, 최소 28%에서 최대 132%)과 전력매매방식 변경(CDE를 통한 전력 매매에서 발전회사가 직접 배전회사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) 등 전력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.
- 그러나 북부와 남부 지역을 관장하는 전력배전회사의 운영회사이며, 50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 Union Fenosa와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와의 논쟁이 계속되어 왔음.
-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Union Fenosa의 잦은 단전에 대해 비난하였고, Union Fenosa는 최근 폐소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전력생산량 부족 등을 비난해 왔으며, 결국 Union Fenosa가 도미니카 정부의 지분 재매입 의사를 수용하게 된 것임.
- 한편,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는 재매입한 전력배전회사(Edesur과 Edenorte)를 민간에 다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, 당분간 국영전력공사인 CDE가 배전회사를 직접 운영할 것으로 전망됨.

책임연구원 김영석(☎3779-6653)
 E-mail : claudio@koreaexim.go.kr